

“영부인 측근의 사익...레임덕 커져”

제1, 20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및 기강 해이를 공격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이자 친문(親文·친문재인) 실세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바른미래당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일탈 행위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손 의원을 겨냥해 “영부인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손 의원은 친척, 측근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여당 간사라는 신분, 영부인의 친구라는 위세를 얻고 자

한국당·바른미래, 손혜원·서영교와 靑 靑어 맹공

“손혜원 ‘친문’ 실세...검찰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서영교, 악질적 범죄행위의 인권옹호자 대변하나”

기의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는 점이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의 본질이다. 민주당 사무처 조사반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손 의원 사건은 정말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재판에 대해 로비, 청탁하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하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도가 어찌됐는지 간에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행동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손 의원은 친문의 가장 핵심으로 문 대통령 민들기에 가장 앞장 선 실세 중에 실세이고,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다면서 ‘손 의원 문제는 검찰 수사까지도 이뤄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한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들과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적절한 책임지는 자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징계를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이 문화재 지킴이로 문갑해서 (투기 의혹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다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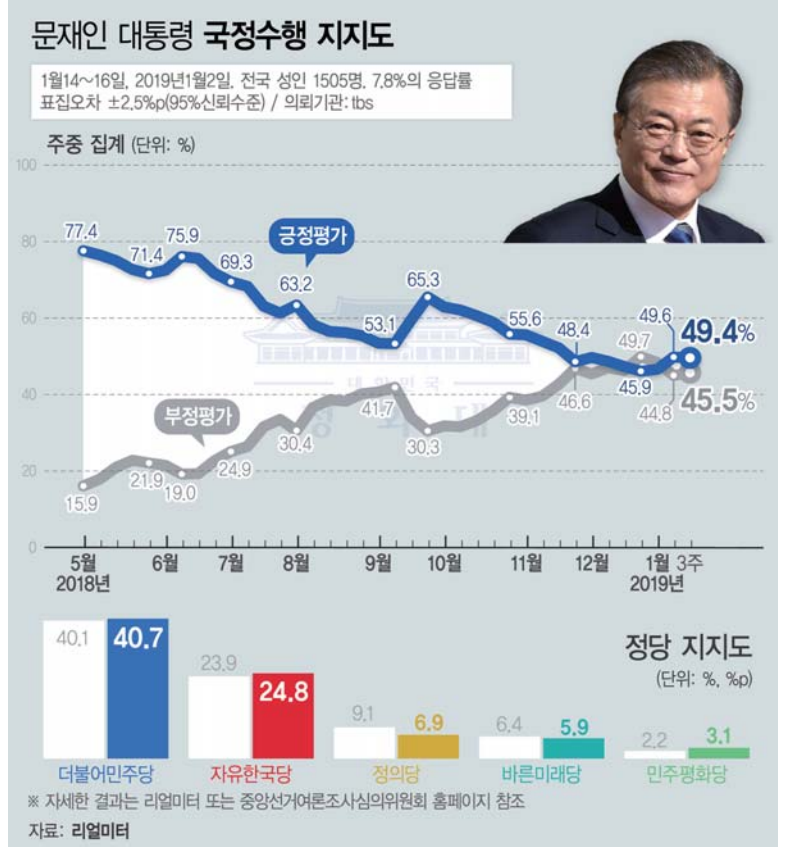
오 사무총장은 또 서영교 의원의 재판정탁 의혹에 대해 “역물한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항변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청탁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를 몰래 강제추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긴 악질적 범죄행위였다. 인권 옹호자로 대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하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김정호 의원의 공랑 감질 논란, 박법계 의원의 지방선거 공표 요구 의혹,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서 의원의 재판정탁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민주당이 내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가시화된 징후로 판단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견고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기강이) 흐트러질 틈새가 보이자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현상)를 넘고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 정부·여당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터져나온 것이다.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면 권력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핵심코어 그룹이 교만해서 권력을 마구 행사했다”며 “진정한 반성없이 덮으려 하면 국민 불신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레임덕도 더욱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文대통령 지지율, 0.2%p↓ 49.4%

리얼미터 “경제 활성화 행보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0.2%p 내린 49.4%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1월3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8%)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4%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7%p 오른 45.5%대(잘못함 29.7%, 잘못하는 편 15.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 대비 0.5%p 감소한 5.1%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밖인 3.9%p로 좁아졌다.

리얼미터는 이번 회보세에 대해 “2주째 긍정평가 우세가 지속된 것은, 지난 15일의 경제인간담회 등 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세부 계층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서울(▼3.0%p, 51.8%→48.8%, 부정평가 46.2%)과 부산·울산·경남(PK)(▼1.8%p, 42.1%→40.3%, 부정평가 52.7%), 30대(▼9.6%p, 59.1%→49.5%, 부정평가 46.0%), 지역업(▼4.3%p, 42.6%→38.3%, 부정평가 57.6%)과 주부(▼2.4%p, 43.9%→41.1%, 부정평가 54.1%)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중도층(▼1.8%p, 47.8%→46.0%, 부정평가 49.5%)과 진보층(▼1.6%p, 73.7%→72.1%, 부정평가 23.3%), 바른미래당(▼14.0%p, 28.9%→14.9%, 부정평가 78.4%)·정의당(▼3.5%p, 70.1%→66.6%, 부정평가 26.7%)·한국당(▼2.4%p, 7.1%→4.7%, 부정평가 91.2%) 지지층에서도 고무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5.1%p, 49.2%→54.3%, 부정평가 41.8%)과 호남(▲2.9%p, 64.7%→67.6%, 부정평가 29.7%), 20대(▲4.1%p, 51.5%→55.6%, 부정평가 37.9%)와 50대(▲1.6%p, 45.6%→47.2%, 부정평가 48.7%), 60대 이상(▲1.6%p, 37.5%→39.1%, 부정평가 55.2%), 노동자(▲5.2%p, 45.9%→51.1%, 부정평가 40.2%)과 학생(▲2.1%p, 49.4%→51.5%, 부정평가 46.0%)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6%p 오른 40.7%를 기록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24.8%), 정의당(6.9%), 바른미래당(5.9%), 민주평화당(3.1%) 순이었다. 한국당은 0.9%p 올랐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2.2%p와 0.5%p 내렸다. 평화당은 전주 대비 0.9%p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평화당 “전두환 골프 대국민 사기...인정사정 없이 구인해야”

민주평화당이 최근 제기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골프의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평화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전씨의 골프장 목적 사업은 광주에서 사저명에 훼손 재판이 열리던 시점”이라며 “당시 전씨가 외병을 이유로 재판을 거

부했는데 그 외병이라는 게 거짓말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하면서 역사의 법정에 서기를 거부한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은 경호팀에 당시 일정을 명확히 확인해서 골프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전씨는 더 이상 거짓말로 법원과 광주시민을 우롱해서

는 안 된다”고도 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전두환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사기치고 있는 것”이라며 “진지 대통령으로서 어떤 진실성도 품어도 찾을 수 없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단호하게 끌어와서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논평을 발표하며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통과시켜야”며 “전두환이 광주에서 어떤 형사재판에 두 번 불출석할 당시 모두 골프장에서 목격됐다. 여지없이 법정구속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